

전주시, '청년친화도시' 기반 강화

청년정책 전담국 신설·전주형 청년일자리·주거 안정·맞춤형복지 등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전주시가 각종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무르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청년을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닌 도시의 주체이자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 청년 중심 도시로의 변화를 본격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존 '파' 단위였던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인구청년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갖췄다. 그 결과 일자리·주거·복지·참여 등 다양한 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청년정책을 단순 지원을 넘어 도시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직 변화는 정책 실행력 강화로 이어져,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촘촘히 확장하는 기반이 됐다.

대표적으로 청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강화했다. 특히, 시는 올해 기존 이공계 중심



전주시가 각종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무르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열린 청년 100인과의 대화 '청춘대담'

교육을 관광·콘텐츠 분야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혔고, 참여 대상도 운영대학인 전주대학교 뿐 아니라 전주지역 타 대학 학생까지 확대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는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청년취업 2000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청년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왔다.

여기에 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업중심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병행해 청년 고용 기반을 폭넓게 강화했으며,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인재 양성에 공을 들였다.

이와 동시에 시는 올해 대표 주거정

책인 청년민원주택 '청춘★별채' 사업을 시행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기존 시세 대비 약 40% 수준이던 임대료를 월 1만 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필수 가전을 설치해 청년들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 함께 두배작금 등 주거지원 및 자산형성 정책을 연계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공고히했다.

시는 또 청년 구직과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환려수당 △청년지역정착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면접장장 무료 대여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등을 추진해 청년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렸다.

동시에 △청년 문화예술축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문화·복지 정책도 병행해 청년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유아·청소년·시민에게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 공감대를 확산했으며, 출생축하금·자녀양육비·첫만남이용권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

나아가, 시는 청년들의 생활과 미래에 직결되는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해 청년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일례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단체 대표로 구성된 청년협의체를 운영해 청년과 시장 간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청년 100인과의 대화인 '청춘대담'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청년의 삶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갔다"면서 "2026년에도 모든 청년이 꿈꾸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청년친화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대표 주거정

따뜻한 도시 문화 '전주함께복지'

사회적 고립 예방·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시리즈 추진

전주시가 라면 한 봉지와 커피 한 잔의 온기, 피자 한 판의 나눔을 통해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전주함께복지 시리즈'를 통해 지역 사회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시는 '전주함께라면'과 '전주함께까페', '전주함께피자'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함께복지 시리즈'가 단순한 기부사업이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이 복지의 주체가 돼 도시 전체를 돌보는 새로운 복지 연대 생태계를 설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리즈의 출발점인 '전주함께라면'은 복지관·동주민센터·청소년 공간 등에 설치된 나눔존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시민이 컵라면과

라면을 기부하면,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복지' 구조다.

두 번째로 추진된 '전주함께까페'는 전주함께라면 공간에 라면과 더불어 커피와 책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커피 한잔으로 누구나 따뜻한 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나눔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함께복지 시리즈의 세 번째 프로젝트는 '전주함께피자'로, 전주시 시니어클럽 시장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맞춤형 건강 먹거리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업이다. /권희성 기자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순항

전주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인권 증진과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생활 밀착형 인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3~2027)' 시행 3년 차를 맞아 55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인권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사회 변화를 반영한 신규 정책을 적극 도입해 인권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섰다.

주요 성과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주형 청년민원 임대주택 '청춘★별채' 지원 △위기 고

립 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함께라면·까페'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 또,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사업도 추진했다.

또한, 시는 시민과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문화 행사도 내실 있게 진행했다. 특히, 시는 올해 사회 변화를 반영한 신규 정책을 적극 도입해 인권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섰다.

주요 성과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주형 청년민원 임대주택 '청춘★별채' 지원 △위기 고

전주 성장 이끌 국책사업 발굴 집중

2027년도 국가 예산 선제 대응... 발굴 보고회 가져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앞당길 2027년도 국가 예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와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29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운동목 부시장, 각 실·국장,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정연구원에서 발굴한 국책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시정연구원은 국책사업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국정과제와 정부 중·장기 계획, 중앙부처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핵심 정책 방향을 분석해 전주시

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4조3,5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발굴했다.

발굴된 사업들은 광역도시·사회기반시설(SOC)·안전, 신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 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국책사업 아이템을 추가 발굴하고, 이번에 제시된 사업과 추가 발굴 사업에 대해 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실국과 출연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국책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최종 확정된 국책사업 중 2027년 국가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



전주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29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운동목 부시장, 각 실·국장,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업은 즉시 대응하고,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과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국립전주전문과학관 △국도대체육회도로(완주상관~전주색장) 등 전주 대변역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대표 주거정

전주시의회 박형배 위원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주시의회 박형배(도시건설위원장, 호지5동)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의회 10대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1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12대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3선 의원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안은 물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형배 위원장은 "항상 시민들의 입



장에서 대변하고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값진 결과물이자, 더 무거운 책임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